

# 이권 개입 광주 북구의원 3명 '경징계'

### 특정 의원 징계 수위 낮춘 수정안까지 제출 "의원들 자정·혁신하겠다는 약속 저버렸다" 의원들에 대한 '공개 사과' 징계안 의결해

광주시 북구의회가 각종 비위·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권 개입 행위로 물의를 빚은 북구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징계인 공개 사과로 결정됐다.

최종 의결 전 상정된 징계안보다 낮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의원들 스스로 자정·혁신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광주 북구의회는 2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선승연·이현수·전미용 의원에 대한 공개 사과 징계안을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소재섭 의원은 선승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미흡하다고 판단, '출석 정치 30일'을 수정안으로 냈다.

찬성 8명, 반대 9명(재적 의원 20명 중 징계 대상자 3명 제외 표결)으로

부결됐다.

특히 최무송 의원은 이현수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경고'로 낮춰야 한다고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도 찬성 4명, 반대 13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의원 3명은 당초 상정된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계약·입찰 관여와 비리·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했다.

선승연 의원은 고항 선배가 대표로 있는 컴퓨터 업체의 전산 장비 구매를 독려하며 공무원들에게 영업 행위를 해왔다.

북구는 최근 1년간 해당 업체의 컴퓨터 본체 512대, 모니터 112대, 프린터 2대 등을 샀다.

이현수·전미용 의원은 검직 신고



광주 북구의회는 2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선승연·이현수·전미용 의원(사진 왼쪽부터)에 대한 공개 사과 징계안을 의결했다.

규정을 어기고 자신 또는 아내가 운영 하는 꽃집서 화훼류를 구청에 판매해 왔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에 아내 운영 꽃집의 사업자 번호를 다르게 기재했고, 전 의원은 무점포로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며 영업했다.

공익 우선과 지위 남용 금지 등을 강조하는 북구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해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는 "제 식구 감싸기, 숨방망이 징계"라며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면, 스스로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의원이 음주운전, 성범죄, 인사정탁, 알선, 이권 개입, 영리 목적 거래 또는 계약 체결 제한 위반 시 '제명'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조례에는 징계 수위가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치에 한정돼 있었다.

경찰은 북구의원 절반 가량이 구설에 오르자 수의계약 비위·비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 파주서 11개월 영아 숨진 채 발견...경찰 사인 확인 중

경기 파주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가 갑자기 숨져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4분께 파주시 A씨(21·여)의 자택에서 11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영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주변에서 다량의 구토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아이가 매트리스에서 내려오다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뒤 발작이 있었다"는 부모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학대 등 외부적 요인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사인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압수수색...투자자들 고소

경찰이 국내 거래량 1위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2일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를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말께 암호화폐 BXA토큰 투자자들이 이정훈 빗썸 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등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투자자들은 빗썸이 당초 약속대로 BXA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신발끈 묶는 여성 '영만튀'...옷에서 '그놈' DNA 채취

경찰이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도망간 남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불상의 남성 A씨를 쫓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사당역 근처 길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신발 끈이 풀려 묶고 있는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 TV와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물을 토대로 A씨를 추적 중이다. 피해 여성도 신고 직후 입었던 옷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옷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DNA 분석 등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부터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 중"이라며 "다음 주께 국과수 분석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살려달라" 의정부 오피스텔 15층서 40대 여성 추락사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15층에서 4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매달려있던 오피스텔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2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5층에서 A씨(40)가 추락했다.

A씨는 추락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추락 직전 난간에 매달려 한참 동안 살려달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이 추락한 오피스텔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 전남 사찰 마스크 착용 '이상무'...일부는 '외부인 출입 금지'도

### 670개소 사찰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점검

전남도 코로나 정국 사찰 점검한 결과 태안사는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가 도내 사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단을 구성,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남도내 670개소 사찰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현재 전남지역 내 문체부에 등록된 전통사찰은 송광사와 대흥사, 화엄사, 백양사 등 97개소로 전국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사찰은 573개소에 이르고 있다.

점검결과 모든 사찰은 마스크 의무 착용과 실내 50인 및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은 물론 행사를 금지

하고 있었으며, 1m 이상 거리 두기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출입 대장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순 쌍봉사, 곡성 태안사 등의 사찰들은 자체적인 외부인 출입 금지를 조치하고 있었으며, 해남 대흥사는 사찰 진입로부터 승차 발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다. 이밖에 전라남도도 사찰내 문화재 시설보수 업체에 대해서도 시



설물 작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이슬기자

## "양향자 지지를" 전화로 불법선거운동, 기초의원 등 4명 송치

### 당내 여론조사 앞두고 한달간 당원·유권자에 전화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측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전화로 당원·유권자에게 지지를 당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서구의회 의원 등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

다. A 의원 등 4명은 올해 2월부터 3월 초까지 민주당 경선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예비후보였던 양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이들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A 의원 등은 지난 3월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민주당 경선 당시 전화여론 조사를 한달 가량 앞두고, 집중적으로 '지지 호소'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